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대응

김관영 지사 등, 익산 산북천·용안 비닐하우스 농가 등 복구상황 점검
전북자치도, 5월 14일까지 풍수해 대비 피해 최소화해 행정력 집중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 발생 빈도 증가와 대형화에 따라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 익산을 선거구로 둔 전북자치도의원(김대중·김정수·윤영숙·한정수 의원) 등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익산시 일원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익산시 산북천 제방 재해 복구 공사, 창리 배수펌프장 및 용안면 비닐하우스 복구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점검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북천 제방 일부가 붕괴돼 복구 공사가 한창인 산북천 제방 재해복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방 보강, 배수통문 설치 등 공사 진척도를 비롯해 안전점검을 함께 살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침수피해가 발생한 창리 배수펌프장 복구 현장을 찾아 배수펌프장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우기철을 대비해 파손된 토출관 응급복구와 가동상태 점검을 3월 말까지 마쳐, 영농기 차질없는 농업용수 공급 및 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독려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호우로 시설하우스 14동, 농작물 및 농기계 침수 피해를 입은 용안면 비닐하우스 복구 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민을 위로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온실내 토양 정비 등 복구 완료 후 현재 수박 모종이 식재됐으며, 오는 4월부터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관계관들에게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로 익산시에서는 220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익산시 공무원 등 관련기관의 한 발 빠른 대응과 도민의 협심으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학

정도로 사전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8월 우기 이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재해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우기 전까지 미완료되는 시설은 장비 및 인력 사전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최근 기상이변으로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어 대규모 피해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며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펌프장 등 재해예방시설 사전 정비, 급경사지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 점검, 주민 참여형 훈련 실시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2월 20일~5월 14일)동안 사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침수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 풍수해(호우,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익산을 선거구로 둔 전북자치도의원 등이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현장행정으로 작년 수해를 입은 익산 용안 비닐하우스 현장을 차례로 찾아 수해복구현장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21건 안건심사·간담회 진행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8일 제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에 의원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영농농기계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등 2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신축 화장실 문제’를 주제로 한 환경부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경 종단 축구’ 성명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화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구 조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도 가결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인후1·2동 선거구 분리… 잊지 않고 최선”

민주 김성주 의원 ‘우리 동네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주시민의 목소리로 만드는 우리 동네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김성주 의원은 여의동과 관련해 “동산역 부활! 전북철도 시대를 새롭게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화물열차만 운행하는 동산역을 승차역사로 전환하고, 동산역을 중심으로 삼례역·익산역·대야역·군산역을 연결하며, 새로운 전북철도는 수소 트램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김성주 의원은 조촌동과 관련해, “전주를 K-무비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바타와 물란 같은

세계적인 흥행작을 찍는 뉴질랜드의 ‘루메우 필름 스튜디오’를 조촌동에 유치해서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거듭나고, 관련 업체들이 전주로 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송천동과 호성동과 관련해 “급증한 교통량으로 송천동 일대가 답답하고 있다. 송천동과 호성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에코시티 서쪽 연계 도로부터 가리내로 확장 공사에 들어가고, 솔내로와 천마산로 도로를 새롭게 개설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후1동과 2동이 전주갑 선거구에 편입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선거구는 분리되었지만 같은 덕진구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많은 현안이 있다”면서 “잊지 않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2024 제1회 추경안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 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이어진 제30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황인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물가 관리에 대한 제언을 했으며, 문은영 의원은 ‘태권시터 무주, 실질적인 도약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공무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의 심사결과 세출 요구액 4,806억7,437만2,000원이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승인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며, “안성두문마를 낚아놓기 방식을 타 지역에서 재현해 논란이 된만큼,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권리 보호와 낚아놓기 보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불법 부정선거? 신속 조사해야”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안호영 후보측 보좌진 당내 경선 앞두고 선거구민 대상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유도… 선관위 등에 고발할 것”
안 의원 “선거운동 방법 설명과정서 발생한 실수”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호영 예비후보 측 보좌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및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266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질 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일 뿐만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는 공직후보자로 추

진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회에 당헌·당규에 따라 안호영 예비후보의 추천을 무효화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정 예비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에 “등록 5일 된 인턴이 경선 선거운동 방법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확인됐다”며 “낙취록에 등장하는 지원은 3월 1일에 등록된 인턴이고, 등록 후 5일째인 3월 5일에 동네친구에게 민주당 경선 투표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턴은 민주당 경선방식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투표가 함께 진행되는 복잡한 방식이라 경선을 앞두고 투표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앞으로 경선 과정에 경선 규정을 숙지해 동일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尹정부 출범 이후 안오른 물가가 없다”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 “尹, 전국 돌며 총선 겨냥 선심성 퍼주기 정책만 비판
“정부,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 집중…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유통구조 불합리 개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 안 오른 물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책임위원회 회의에서 “기름값, 전기요금, 교통요금, 생필품 모든 것이 올라 비명을 지르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4월 총선 때문에 미뤄둔 유통세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잠재해 있다. 선거 후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의 처음이자 끝이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며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을 위협하게 만든다.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 금리를 내려야 소비도 늘고 내



수도 살아난다. 물가 안정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서민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민생토론회도 총선을 이라고 질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최우선 민생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벌써 18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면서 “총선을 겨냥한 온갖 개발 공약과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물가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 한 번 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대

폭 늘려 식품 가격을 안정시켜줄 것을 요구한다”며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곳곳에 직판장을 개설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물가 안정에 동참해 기여해 주기 바란다. 국제 원료가격 상승으로 상품값을 올렸다면,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내려야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기업도 살고 국가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도 기업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미래’의 이름으로 직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당명 변경과 관련, 중앙위 참석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미래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특별취재반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지난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미처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는 먼저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시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도에 편입되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건수가 2021년 10월지 1억 9,300만원, 2022년 31월지 2억원, 2023년 51월지 4억9,800만원으로 수천 필지에 이르는 미지급용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보상실적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내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상태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환경위, 친환경 감각류 내수면 어업시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4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일 현지 의정활동으로 완주 소재 친환경 감각류 내수면 어업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친환경 감각류 내수면 어업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시찰·점검하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이병철 위원장은 “토종 내수면 감각류 종 보존 연구 및 꾸준한 종자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내수면 감각류 연구시설은 지난 3년간 총 52억원의 예산으로 ICT 기반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며, 내수면 감각류 종자보존 및 신품종 양식기술 등을 통해 도내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교육위, 남원국악예술고 교육과정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8일 제407회 임시회 기간 남원국악예술고를 방문하여 교육과정과 현안사업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남원국악예술고의 오랜 숙원사업인 특목실과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시설 구축을 위한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타당성을 점검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다양한 교육과정에 중요 하지만 교육공공체 모두가 만족하고, 학생들에게는 자기



개발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개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보다는 내실 있고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